

인도 신정부의 경제 · 통상방향과 전망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인도 신정부 출범의 의의 / 3

- | | |
|----|-----------------------------|
| 3 | 1. 총선결과와 정당구도 변화 |
| 5 | 2. 총선결과의 의의 |
| 7 | 3. 신정부 내각 주요 인물 및 성향 |
| 11 | 4. 신정부 출범에 대한 인도 국내 반응 및 평가 |

II. 인도 신정부의 주요정책 방향 / 13

- | | |
|----|--------------|
| 13 | 1. 경제전반 |
| 16 | 2. 통상정책 방향 |
| 17 | 3. FDI정책 방향 |
| 19 | 4. 산업별 정책 방향 |

III. 인도경제 및 한-인도 교역 · 투자 전망/ 23

- | | |
|----|-----------------------|
| 23 | 1.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인도경제 전망 |
| 24 | 2. 한-인도 교역 및 투자 전망 |

요 약

금년 5월, 세계최대 민주주의 선거로 일컬어지는 인도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집권여당인 UPA연정이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국민회의당을 중심으로 한 UPA연정은 그간 주요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공산정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의회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연임된 만모한 싱 총리를 필두로 하여 대외개방과 개혁성향 인물들로 구성된 신정부는 지난 정권의 경제성장정책을 지속하며, 그간 공산정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금융 및 유통업 등의 개방과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신정부의 경제전반에 걸친 정책방향은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 유지, 경기부양정책 실시로 악화된 재정적자 해소, 금리인하·물가안정·감세를 통한 내수 촉진, 제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 세무·회계·노동관련 제도 개혁 등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개혁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통상정책은 WTO를 중심으로 대외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되 FTA 등 양자간 협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계류 중인 한-인도 CEPA, 인도-아세안 FTA, 인도-일본 EPA 등의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투자정책에 있어서는 경기회복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자본 유입을 중심으로 한 FDI 규제완화를 계획 중이다. 개방이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간절히 개방을 원하는 소매유통업을 비롯하여 인프라건설업, 금융업, 국방산업 등이다.

산업별로는 우선 부족한 전력·인프라의 확충과 통신품질 향상 및 보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이 예상되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심각한 재정적자를 고려하여 민간 및 외국자본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인도정부는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UPA연정이 지난 집권기간에도 경제성장목표를 견실하게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집권기간 중에도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FDI 상한제한이 폐지 또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도 내 자금수요와 외국기업의 투자의향이 맞아 떨어지는 소매유통,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 분야 등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도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는 한-인도 CEPA의 서명과 발효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는 협정발효 여부가 불투명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기존 정권이 재집권에 성공한데다 국민회의당이 공산정당 없이 연정을 구성함에 따라 협정서명이 조속한 시일 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KOTRA가 현지 KBC를 통해 인터뷰한 인도기업들은 신정부가 내놓을 정책에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또 이들은 대외개방적인 집권여당의 성향으로 볼 때 수출이나 투자 모두 외국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인도주재 한국기업들은 정권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 하지만 앞으로도 前정권때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개혁과 개방 수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표하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I. 인도 신정부 출범의 의의

1. 총선결과와 정당구도 변화

가. 총선 경위 및 결과

총선 전 예상된 불안정한 정국

- 총선결과 발표 직전까지 UPA¹⁾(통일진보연합)와 NDA²⁾(전국민주연합) 모두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산정당 및 카스트 기반 정당들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갖는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한 달간의 대장정으로 치러진 총선

- 하원(Lok Sabha) 543석을 대상으로 5년마다 개최되는 인도총선이 지난 4월 16일에 시작되어 23일, 30일, 5월 7일, 13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치러짐
*전체 유권자 7억 1,400만 명 중 총 3억 6,000만 명이 투표

예상을 뒤엎은 집권연정 UPA의 대승

- 여당인 UPA연정과 야당인 NDA연정이 접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UPA연정이 과반에 가까운 득표를 하며 대승
* UPA연정의 최대 정당은 국민회의(Congress)당이며, NDA연정의 최대 정당은 인도국민당(BJP)³⁾

- NDA연정은 국민회의당의 단일 의석수보다도 적은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그치는 참패를 기록

- 금번 선거승리의 가장 큰 공로자는 전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만모한 싱 총리이며, 이로써 인도 독립 후 초대총리인 자와할랄 네루 이후 최초로 연임을 하는 총리가 됨

1) United Progressive Alliance
2)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3) Bharatiya Janata Party

나. 정당구도의 변화

- UPA연정은 하원의 과반수인 272석(총 의석수 543석)을 넘는 274석을 확보함으로써, 지난 정권에서 주요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공산정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

* UPA연정 내 국민회의당(INC)이 206표, 기타정당이 68표로 274석 확보

연정 구성 최종 결과표

정당명	의석수
Indian National Congress (INC)	206
Dravida Munnetra Kazhagam (DMK)	18
Nationalist Congress Party (NCP)	9
All Trinamool Congress (AITC)	19
Jammu & Kashmir National Conference (J&K NC)	3
Jharkhand Mukti Morcha (JMM)	2
All India Majlis-e-Ittehadul Muslimeen (AIMIM)	1
Viduthalai Chiruthaigal Katchi (VCK)	1
Kerala Congress (Mani) (KC-M)	1
Sikkim Democratic Front (SDF)	1
Jharkhand Vikas Party	1
INDEPENDENT	7
JANATA DAL (SECULAR) - JD(S)	3
Bodo People's Front	1
Nagaland People's Front	1
UPA 연정 계	274
BAHujan SAMAJ PARTY (BSP)	21
SAMAJAWADI PARTY (SP)	22
RASHTRIYA JANATA DAL (RAD)	4
연정 외부 지지세력 계	47
총계	321

2. 총선결과의 의의

□ 경제성장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

- 집권정당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인도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
 - UPA연정은 지난 2004-2009년의 집권기간 중, 농촌지역의 빈민구제와 일자리 창출, 농민을 위한 대규모 채무탕감 정책 등을 통해 전체인구의 60% 이상인 농민을 포용하는 정책을 실시
 - 도농간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시킴으로써 인도 전 국민이 골고루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도록 함

□ 카스트·인종·공산주의 등 구시대적 이슈가 총선에 미친 영향은 미미

- BJP는 경제개발정책보다는 공산주의적 이미지로 호소했으나 가장 큰 지지 기반이었던 중산층으로부터도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
 - 소비자 물가상승, 수 천만에 달하는 실업문제, 2008년 몸바이테러와 같은 테러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함
- 유권자수가 가장 많은 우따르프라데시주의 총리이자 불가촉천민(달릿)의 여왕으로 불리는 BSP Mayawati대표는 불가촉천민 출신의 기독교도와 소수 종교 신봉자, 무슬림출신의 기타 하층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공약을 했으나, 목표로 한 45석의 절반에도 못 미친 21석을 확보하는데 그침

□ 젊은 리더십, 다양한 계층에 대한 포용정책이 주효

- 중산층과 젊은 연령층은 81세인 BJP의 L K Advani 총수보다 국민회의당의 차세대 지도자인 라홀 간디(Rahul Gandhi)⁴⁾를 보다 열렬히 지지
 - * 인도 인구의 2/3 이상이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로 선출된 의원 중 60%가 25-55세 그룹에 속함

4) 현재 국민회의당 총수인 소냐 간디의 아들로, 인디라 간디, 라지브 간디 등으로 이어지는 네루-간디 가문의 엘리트 정치인

- 특정 종교나 계층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인도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정책을 약속한 국민회의당이 힌두교 중심의 BJP보다 더 큰 국민적 지지를 받음
- 반면 BJP는 비힌두국민을 차별한다는 이미지로 인해 오히려 유권자의 반감을 산 바 있음
- * 힌두를 공격한 무슬림에 대한 BJP 소속 Varun Gandhi의 ‘증오연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BJP는 무슬림은 물론 여타 유권자들의 분노를 산 바 있음

□ 과반의석을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 추진이 가능

- 안정적인 의석수를 기반으로 공산정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금융 및 유통업 등의 개혁 개방과 기타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 등의 추진이 가능해짐

BJP의 색채 및 정책기조

▶ **BJP의 색채**

- BJP는 힌두 우월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폐쇄적인 입장, 파퓰리즘 정책으로 대표됨
-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현실성 없는 정책을 토대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과거의 부패 정당 이미지를 벗고 현대화된 색채를 띤 국민회의당과는 상반된 이미지를 띠

▶ **BJP의 정책기조**

- 소매유통업, 금융보험업 등 민감분야에 대한 FDI 추가 개방 금지
 - BJP는 소매유통 분야에 대한 외국인자본과 대기업자본 유입을 반대하면서 특히 소매 유통업은 비기업형 영세 유통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민영화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은 배제하고 인도기업에게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
- 공산정당과 함께 각종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하며 프로젝트 지연을 주도
 - 공산정당 및 BJP는 120억 달러 규모의 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영국 베단타 자원기업의 알루미늄 정제공장 프로젝트, 타타자동차의 나노자동차공장 부지 매입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각종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음

▶ **BJP집권 실패의 의의**

- 대부분의 기업들은 BJP가 집권에 실패하고 현 정권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최근 몇 년간의 경제정책 기조가 그다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표명
- 재집권한 UPA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정책노선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해 주기를 희망

3. 신정부 내각 주요 인물 및 성향

□ 총리(Prime Minister) : Manmohan Singh



- 지난 정권의 17대 총리를 역임한 만모한 싱 총리는 금번 총선을 승리로 이끈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며, 18대 총리로 연임되어 2번째 임기를 시작함
- 최초의 시크교도 총리로 힌두사회에서 비주류인 시크 교도가 총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최초 임명 당시 화제가 됨
- 옥스퍼드에서 수학한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1982년부터 1985년까지 RBI⁵⁾ 총재, 1985년에서 1987년까지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의 부위원장 (Deputy Chairman)을 각각 역임하였으며,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재무장관직을 수행함
- 1991년 Rao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직을 수행하던 당시, 인도경제를 개방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산업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푸는데 주력함
- 2004년 5월부터 첫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5년간의 임기동안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가난한 농민들의 부채를 탕감하며 친산업적인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펼침
- 신정부에 있어서도 해박한 경제지식과 개혁 · 개방정신을 토대로 경기 부양, 정부 재정구조 개선, FDI 정책 등 산적해 있는 경제현안 해결을 과감하게 밀어 붙일 것으로 예상됨

5) Reserve Bank of India, 인도중앙은행

□ 재무장관(Finance Minister) : Pranab Mukerjee



- 국민회의당에서 가장 연로한 의원 중 한 명인 프라납 무커지 재무장관은 1973년 장관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한 이래로 산업개발부, 해운교통부, 재무부, 재정은행부, 상공부, 국방부, 철강부, 광업부 등 다수 부처에서 장관경력을 쌓아옴
- 대외부문에서는 IMF,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의 총재이사회(Board of Governors) 멤버로 활동한 바 있으며, G-24(IMF와 세계은행의 부속 관료그룹)의 의장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음
- 1984년에는 유로머니에서 선정한 5인의 재무장관에 선정된 바 있는 유력인사로 인도정책 형성의 핵심인물로 꼽힘
- 그는 막힌 정국을 잘 풀어가는 뛰어난 협상력으로 유명하여, 이번 정권에서도 야당의 반대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정국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2005년 특허법 수정안 협상 시, 공산정당이 법안통과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직접적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던 그가 해결사로 초빙되어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음
 - 핵확산방지조약의 조인 없이 인도-미국간 민간핵협정 서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것이 지난 임기 중의 그의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외무장관(Foreign Minister) : S.M. Krishna



- 미국유학중 케네디(John F Kennedy)의 선거캠페인에 참가하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은 크리슈나 외무장관은 1962년 카르나타카주 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인도정치에 입문함

- 1968년 이후로 4·5·7·8대 총선에서 승리하여 의원직을 수행하였으며, 인디라 간디와 라지브 간디 시절에 장관직을 수행함
- 크리슈나 장관은 카르나타카주의 주도인 방갈로르를 투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방갈로르를 서남아시아의 IT 허브로 변모시킨 방갈로르 현대화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음
- 대외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그가 외무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향후 파키스탄과의 관계, 중국, 북미지역 등과의 활발한 외교활동이 예상됨

□ 내무장관(Home Minister) : P. Chidambaram



- 친시장주의 개혁의 선봉으로 알려진 치담바람 장관은 1996~1998년에 재무장관을 수행함
 -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자발적 소득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편의를 동시에 도모한 바 있음
 - 2008회계년도 예산안에서는 과도하게 누적된 농민들의 부채를 상당부분 탕감해 줌으로써, 2008년 하반기에 농촌부문의 소비가 진작되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인도경제가 7%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2008년 11월 뭄바이 테러사태 발생시 당시 내무장관이 경질되면서 후임 내무장관으로 임명된 바 있고 이번 정권에서도 내무장관직을 수행하게 됨
- 파키스탄과의 긴장관계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비효율적인 테러감지 시스템과 대응능력을 개선해 국가 안보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상공장관(Commerce and Industry Minister) : Anand Sharma

- 상공장관 연임이 유력시 되었던 카말 나트(Kamal Nath)를 제치고 아난드 샤르마 前 외교부부장관 (Minister of State in the Ministry of External Affairs)이 상공장관으로 임명됨



- 부장관에서 각료장관으로 승진된 것과 상공부가 중요 부처라는 점에서 샤르마의 상공장관 발탁은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로, 그간의 공적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분석됨
- 샤르마 장관은 히마찰프라데시의 상원의원이며 상원의원으로 그간 4회 선출된 바 있음
- 인도의 대외관계 개선에 공을 세운 것이 금번 각료장관 입각의 주요 사유로 알려져 있는 그는 특히 남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남-남 협력관계 강화에 공헌함
 - * 이 공적을 인정받아 2008년 11월 가나 대통령이 민간에게 수여하는 최고훈장인 "The Order of the Companion of Volta"를 수상했으며, 금년 1월에는 아이보리코스트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민간훈장인 "Commander of the National Order of Merit"을 수상하기도 했음
- 샤르마 장관은 세계경제 시스템에 맞추어 인도경제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도의 산업성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언함
- 샤르마 장관은 UPA정권이 지난 집권 시기에 꾸준히 추진해 온 FTA 정책과 중요 산업분야의 외투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4. 신정부 출범에 대한 인도 국내 반응 및 평가

□ 언론 및 미디어의 평가

- 언론과 각종 미디어는 싱 총리가 이끄는 집권연정의 압도적인 승리에 대해 크게 호평함
 - 총선마다 파퓰리즘에 휘둘러 왔던 인도 정치역사상, 안정적인 통치력이 승리한 이번 총선은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됨
 - 카스트·종교·좌편향 성향 등을 강조한 정치에 지쳐있는 인도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함
 - 금번 정권이 세계경제가 위축되는 시기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파키스탄과의 긴장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지난 정부가 빠른 경제성장과 분배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보다 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지금, 효율성과 분배의 황금비율을 찾는 뛰어난 통치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함

□ 주식시장의 반응

- 총선 결과에 예민하게 반응해 왔던 인도 주식시장은 금번 총선결과에 대하여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이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총선결과 발표 후 첫날인 2009년 5월 18일, 개장 후 수분 내에 센섹스 (Sensex)지수가 12% 가량 상승,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11시 55분 거래가 재개된 후 다시 5분 만에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장이 마감됨
 - 센섹스 지수는 전일대비 2,110.79포인트(17.3%) 상승한 14,284.21로 장을 마감하였으며, 두 번의 서킷브레이커로 장이 완전히 마감된 것은 BSE 사상 처음 있는 일임

- 이 같은 상승장은 외국인기관투자(FII)의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주가상승과 동반하여 루피화 가치 또한 최근 11년간 가장 큰 일일상승폭인 3%를 기록하며 47.88루피로 마감됨

□ 산업계의 평가

- 안정적인 정국운영과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계는 UPA연정의 승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인도 최대 IT기업인 인포시스(Infosys)의 Nandan Nilekani 공동회장은 인도의 경제정책과 개혁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며,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과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평가
 - 소비재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Godrej 그룹 Adi Godrej 회장은 금번 총선 결과가 소비심리를 개선할 것으로 내다보며,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포함한 다방면의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함
 - 다수의 산업계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금융, 노동, 부동산, 외국인직접투자 부문의 개혁이 이뤄질 것을 기대

II. 인도 신정부의 주요정책 방향

1. 경제전반

□ 개혁을 통한 7~8%대 경제 성장기조 유지

- 2009~10 회계년도 성장률이 5~6%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지속된 평균 8% 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혁 실시
- 다만 신정부는 정치적 입지를 고려, 급격한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농업개혁과 재정지원을 통해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는 포괄적 성장을 추진할 예정

□ 재정구조의 개선

- 장기적인 성장 기조 유지를 위해, 그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재정 적자를 해소
- 지난 정권중 지방정부를 포함한 재정적자규모가 GDP의 10%대 이하로 낮아졌으나, 2008년말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단행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손실규모가 크면서도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민간운영이 유리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민영화 추진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및 정부재정 확보안

- ▶ 인도 중앙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공기업 214개사 중 160개만이 흑자경영을 하고 있으며, 54개사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임. 흑자경영 160개사중 48개사도 순자산규모가 마이너스.
- ▶ 전 정권에서의 민영화정책은 이를 반민중적인 정책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대한 연정내 공산정당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

<공산정당의 반대로 취소된 전략적 매각건>

- Balmer Lawrie & Co.
- Engineering Project India
- Engineers India Limited
- State Trading Corporation
- Shipping Corporation of India
- NBFC
- National Aluminium Company Limited (NALCO)
- Rashtriya Chemicals & Fertilizers Limited
- National Fertilizers
- Hindustan Petroleum
- Sponge Iron Corporation

- ▶ 공산정당과 결별한 신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각종 개혁 및 경기부양 정책에 소요되는 재정책보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
- ▶ 공기업 민영화 시나리오
 - 지난 6월 4일 프라딕바 빠틸 대통령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방침을 언론에 밝힌바 있으며 정부지분 하한을 51%까지 끌어내리는 범위 안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임
 - * 영세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 인도정부는 100%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번 시나리오에 포함시키지 않음
 - 최근 주식시장이 15,000선을 넘음으로써 이 정도 수준의 매각만으로도 충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
 - * 상장 공기업에 대한 정부지분은 시가로 8조 8천억루피에 달하기 때문에, 인도정부가 정부지분을 51%까지 끌어 내릴 경우 현재 시가로 3조루피까지 재원조달이 가능
 - * 상위 10대 공기업의 10% 지분 매각만으로도 8,500억루피 조달이 가능
 - 향후 2년내 우선 민영화 대상기업으로는 NHPC(국가수력발전), RITES(교통 인프라 관련 건설 및 감리기업), OIL India, UTI 자산운용(정부산하 자산운용사) 등이 있으며, 지난 정권에서 민영화에 실패한 공기업 25개를 우선 지분 매각 대상으로 분류. 이 밖에도 대형공기업인 BSNL(통신), MMTC(천연자원), NMDC(광산) 등도 순차적으로 민영화할 전망

□ 내수 촉진을 위한 금리 인하와 신용의 원활한 공급

-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내수확대를 위한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도시지역의 소비위축 원인으로 진단되는 신용공급 차단을 해소
 - 정책금리 인하와 중앙은행 기준률 축소를 통해 신용을 공급하고, 그 효과가 중소기업과 개별 가구에까지 원활히 전달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 이와 동시에 신용공급이 부실여신 증대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인 프레임워크 마련

□ 물가안정과 감세를 통한 소비심리 개선

-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금리·통화정책을 통해 세계적 경기 위축에 효과적으로 대처
- 중기적으로 물가수준을 3% 대로 내린다는 정책적 목표 하에 2010년까지 4%로 예상되는 낮은 수준의 도매물가지수가 두 자리 대에 달하는 소매물가지수를 끌어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결고리 마련

□ 인프라투자 장려

- 수출 원동력인 제조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경제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프라부족을 개선
 -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지방 및 농촌지역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주도보다는 민관합동투자 형식으로 인프라개발 진행

□ 세무·회계·노동 관련 제도 개혁

- 기존의 소비세와 서비스세를 통합한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해 조세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추구

- 2011년 4월부터 인도의 회계기준을 국제 회계기준에 맞추어 변경시킨다는 목표 하에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 인도중앙은행(RBI) 및 인도보험규제당국(IRDA)이 각종 관련 법령을 손질할 예정
- 철저하게 근로자 중심인 인도의 노동관련 법률을 보다 친기업적으로 개혁하여 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치

2. 통상정책 방향

신규 5개년 대외무역정책 추진

- 대외무역국(DGFT)이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5개년 대외무역정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인데 인도산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대외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될 예정임

DDA 중심의 자유화 및 FTA를 통해 DDA 지연을 보완하는 입장 유지

- 前 집권기간과 동일하게 DDA를 중심으로 대외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DDA지연을 FTA를 통해 보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FTA로는 한-인도 CEPA, 아세안과의 FTA, 인도-일본 EPA, 인도-EU FTA 등이 있음
 - 아세안과의 FTA, 한-인도 CEPA는 첫 각료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다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일본과의 EPA중 상품분과에서는 인도산 농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인하, 제3국 제품의 인도유입을 막기 위한 원산지규정, 인도의 대일본 IT 서비스 수출에 대한 과세, 기타 일본의 비관세장벽 등이 핵심쟁점으로 남아 있음

수입규제 정책은 지속

- 인도는 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한 2차산업 기반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옴

- 특히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무역적자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금년에도 반덤핑관세 및 세이프가드를 이용한 인도의 수입규제는 지속될 전망
- 인도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는 절차와 피해액 산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는 자국산업에 미치게 될 피해여부를 먼저 조사한 후 잠정관세를 부과하게 되나, 인도정부는 산업계의 피해를 접수하면 먼저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실제 피해여부는 그 후에 조사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최근에는 세이프가드가 반덤핑관세보다 빨리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남발되고 있음
- 인도는 특히 인도산이 가격 또는 품질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피해호소가 있는 경우 수입규제조치를 발동
- 한편 최근의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 피해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관세 부과가 연기된 사례가 있어 향후 무역규제조치에 있어 정책결정이 다소 신중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3. FDI정책 방향

가. 개요

- 인도정부의 개방정책은 무역·투자를 포괄하기보다는 투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1991년의 경제개방정책 시행 이후 외국자본의 유입이 인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핵심동력이 되어 왔기 때문
- 신정부의 개방정책도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형태로 전개될 전망

나. 분야별 FDI정책 전망

□ 소매유통업

- 소매유통업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방을 가장 원하고 있는 분야중 하나로, 공산정당이 전정권에서 영세 소매업자 보호를 이유로 강경하게 반대함으로써 개방이 지연되어 온 대표적인 사례임
- 해당분야에 정통한 정부관료에 따르면 단일브랜드 소매유통업의 경우 100%까지, 멀티브랜드의 경우 일부 지분 합작투자까지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
- 지분상한에 대한 규제완화뿐 아니라, 새로운 매장을 개설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35~40개에 달하는 승인건수를 대폭 줄이는 등 투자유치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

□ 인프라 건설업

- 인도의 인프라건설 소요액은 5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도 외국자본의 유입이 시급한 상황
 - * 투자유치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중교통, 민간항공, 위생, 수처리, 발전 등
- 인도정부는 해당분야의 외국인투자 승인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해외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임
- 인도정부는 또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일부 비효율적인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정부보유 지분을 매각하여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 금융업

- 보험업, 펀드펀드, 은행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개혁은 2005년부터 지연되어 온 사안임
 - 보험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이 26%에서 49%로 확대될 전망

- 은행업은 지분상한이 74%임에도 불구하고 10%로 묶여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결권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정부소유 은행의 정부지분을 낮추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국방산업

- 현재 26%까지만 투자가 허용되고 있는 국방산업의 경우, 연임된 국방장관이 지난 임기에 “사안별로 평가해서 49%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지분상한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4. 산업별 정책 방향

□ 전력산업

- 평상시 9%, 피크타임시 11%까지 부족한 전력수급 개선을 위해 인도정부는 2012년까지 현재 생산용량(145GW)에 90GW를 추가한 235GW의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음
 - * 인도의 2008회계년도 전력 생산용량 증설실적은 3,454MW로 연간목표인 11,061 MW 증설의 31%에 불과
- 이를 위해서는 15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도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권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인도와 미국간 민간 핵협력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핵 발전 관련 분야의 투자 장려책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핵 발전 용량은 전체 발전용량의 3%에 불과하여 이 분야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전력부족 현상은 발전용량의 부족뿐만 아니라 송배전과정에서의 빈번한 도전 및 누전에도 기인하고 있어 송배전분야의 대규모 민영화도 예상되고 있음

□ 인프라건설업

- 인도는 11차 5개년 개발계획(2007~2012 회계연도)과 12차 5개년 개발계획(2012~2017 회계연도)에 각각 5천억 달러와 1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고려하고 있음
- 지난 2월 UPA연정이 의회에 제출한 2009~10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FDI기준 완화를 통해 인프라투자를 위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현재 GDP의 5%에 불과한 인프라 투자지출을 2014년까지 9%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하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임

□ 통신업

- 통신서비스 품질제고 및 통신서비스 보급률(45%) 달성을 위해 인도정부는 금후 5년간 통신업 분야에 약 7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이 예상됨
 - 인도정부는 제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전파스펙트럼을 입찰방식으로 할당할 예정이며,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최소입찰금액을 당초 시장의 기대수준 보다 높게 책정할 것으로 보임
 - * 제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 광대역 배분 시, 국방부와 통신부, 민간 사업자간에 예상되는 이해관계 충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통신망재배분 등의 조치도 예상됨
 - 인도정부는 또한 브로드밴드 무선통신 서비스권도 입찰을 통해 배분할 예정이며, 이외에 국영통신회사인 BSNL의 민영화와 아울러 모바일 가상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전화 등도 허용될 전망임

□ 자동차산업

- 인도정부가 인도를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6~16년에 걸친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10개년 계획은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新통합세제인 GST(Goods & Service Tax)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2010~11회계연도 중 자동차관련 중앙판매세(Central Sales Tax)는 0%로 인하될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책검토 후 차종에 따라 차등 인하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1500cc 이상 차량에 부과하던 15,000루피, 2000cc 이상 차량에 부과하던 20,000루피의 추가 판매세를 삭감할 예정임
- 구체적인 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친환경 기술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임

□ 철강산업

- 인도정부는 국내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9~10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제조세(excise duty)를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는 안을 제출함
- 자본재 생산업계의 수입철강에 대한 규제조치 완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도정부는 자국 철강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입 열연강판에 대해서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앞으로도 철강관련 크고 작은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

□ 석유화학산업

- 인도 신정부는 PCPIR⁶⁾정책을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임
 - 이 지역에는 SEZ, 산업공단, 보세구역, EOU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
- 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실시할 예정
 - 휘발유와 디젤가격의 인상폭 규제를 완화하고 국영기업이 판매하는 천연가스 가격을 인상

6) Petroleum, Chemicals and Petrochemical Investment Regions의 약자. 신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하여 도로·철도·항만·공항간 연계성이 좋고 환경안정성이 보장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특례단지 설립정책으로 이 단지에는 중앙 및 주정부의 윈스톱 행정지원은 물론 생산-공공재-물류-거주시스템까지 일원적으로 제공됨

- 원유가격이 배럴당 75달러 미만인 경우, 공기업에 추가인하 없이 가격을 고정할 수 있는 자율권 부여
- 국영 ONGC(Oil and Natural Gas Corp.)와 Oil India Limited에 이들 기업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저가로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가
- 반면 일반인의 구매가능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적정 가격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III. 인도경제 및 한-인도 교역 · 투자 전망

1.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인도경제 전망

□ 외국자본의 지속적 유입 및 안정적 경제성장 전망

- 집권당의 개혁·개방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직·간접투자가 다 같이 늘어날 전망
 - '08년 4월부터 '09년 1월까지의 FDI가 총 238억 8,5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5%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앞으로도 이 같은 직접투자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 FDI 상한제한이 폐지 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도 측의 외국자본 수요와 외국기업의 투자의향이 맞아 떨어지는 소매유통분야,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UPA연정이 지난 집권기간에도 경제성장목표를 견실하게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집권기간 중에도 안정적인 고도성장이 달성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존재
 - 신임 무커지 재무장관은 이번 회계년도 하반기부터 인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집권 초기에는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더라도 지출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대외교역 확대 예상

- 인도정부가 조만간 발표예정인 2009~14 회계년도 신교역정책에서 대외교역 개방정책을 보다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외교역 확대와 더불어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 원부자재 및 자본재 조달도 늘어날 전망
 - 수출용 원자재 및 자본재를 대상으로 한 관세 감면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을 목적으로 SEZ로부터 조달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음

□ 인프라·제조업·석유화학·IT산업 등 성장 전망

- 신정부가 전국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 인프라 확대 및 이를 기초로 한 제조업·석유화학업·IT산업 등의 발전에 정책기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들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인프라관련 주요 수혜 분야는 발전·송배전·도로·항만 등이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가전·기계류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IT산업은 이번 정부에서도 IT서비스 수출과 관련된 관세혜택과 보조금지급 등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2. 한-인도 교역 및 투자 전망

가. 주요 사안별 전망

□ 한-인도 CEPA 조기 서명 및 발효 전망

- 2006년 초에 시작된 한-인도 CEPA협정은 작년 말 협상이 완료되고 현재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로, 2009~10회계년도 예산안 통과 후 바로 각료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총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는 협정발효 여부가 불투명해 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기존 정권이 재집권에 성공한데다 국회의당이 공산정당 없이 연정을 구성함에 따라 서명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석유화학, 인프라, 제조업 등 진출확대 예상

- 신정부 출범 후 2009~10 회계년도 예산안이 조만간 각료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선심성정책을 포함한 각종 산업장려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산업장려책은 외국인투자 개방과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주요 수혜업종인 석유화학, 인프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 탄력

- 약 4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일관제철소건설 프로젝트)가 그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UPA가 재집권함에 따라 빠르게 추진될 전망
 - 제철소건설과 연관된 광산 탐사 및 채굴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었으나,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 온 만모한 싱 총리가 연임되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힘이 실릴 전망
- 지난 1월 오릿사 州政府가 다르가르지구 칸다다르(철광석 매장지) 지역 탐사권자로 포스코를 최종 확정하여 중앙정부에 추천
 - 인도 중앙정부는 조만간 오릿사 주정부의 추천에 따라 탐사권자로 포스코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포스코는 이르면 오는 8-9월 정도에 탐사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최소 1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신규로 인도에 투자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기자재의 인도 수출 또한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

- 투자 금액 : 총 120억(16조 원)불 규모로 3단계에 걸쳐 투자
 - 제철소 건설(1200만톤 규모), 철광석 채굴 및 개발, 인프라개발 등 포함
- 제철소 부지 : 인도 동부 오릿사주의 Paradip항 근처
- 이 투지는 인도가 30년간 이용 가능한 6억톤의 철광석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광산 탐사권이 곧 확보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투자가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제철소 뿐 아니라 철도, 도로, 전용항구, 발전소, 용수시설 등도 같이 개발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해당 부지는 약 4,000 에이커임

나. 인도 국제경제관계연구소(ICRIER⁷⁾)의 한-인도 CEPA 관계 전망⁸⁾

- 한-인도 CEPA는 2009~10 회계년도 상반기(9월전)중 서명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기 침체로 한국과 인도 모두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개방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추가적인 서명지연은 없을 것임
-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한국은 기계류 등 자본재 분야와 내구소비재, 인프라부문 등에 대한 투자가 유리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에 인도 제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인도는 농산물 순수출 국가로 농산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와 상호보완이 되어 양국의 장기적인 동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 인도기업들의 인도 경제 및 한-인도 관계 전망⁹⁾

□ M사(한국으로부터 농업기자재 및 부품 수입)

- 한국산 농업기자재와 부품은 중국산에 비해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경쟁력도 있어 수입이 증대되었는데, 한-인도 CEPA로 가격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고 관련기업의 인도투자진출도 증대된다면 한국기업의 인도 내 입지가 확고해질 것임

□ P사(한국으로부터 산업자동화관련 제품 조달)

- 신정부는 前정권때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갈 것이므로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나, 한국산은 물류비에서 경쟁력이 상쇄되므로 수출보다는 인도 내 직접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으로부터의 운송비용은 이탈리아·독일 등 유럽으로부터의 조달비용보다 높으며, 일본과는 유사한 수준

7)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8) KOTRA 뉴델리KBC가 실시한 인터뷰에 기초

9) 상동

- 이밖에도 각종 제조업 장려정책이 나올 것이므로, 기술 경쟁력이 중요한 산업영역에 한국기업이 직접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O사(건설 및 부동산 개발사업)

- 정부가 지방도시에도 다양한 건설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등 인프라구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함
 - 정부가 서민주택의 보급 확대도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
- 부동산 개발업 분야의 FDI가 보다 자유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한국 기업들도 인도 부동산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투자확대의 호기가 될 것으로 보임
- 2010년 커먼웰스게임 개최 시점에 즈음해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관련 업계가 활력을 떨 것으로 예상함

라. 인도 주재 한국기업들의 인도 경제 및 한-인도 관계 전망

□ 공통의견

- 정권이 교체된 것이 아니므로, 총선 전후를 비교하여 큰 차이는 느낄 수 없으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함

□ S은행

- UPA 정권의 재집권을 통해 재정적자 감소, 부도율 감소 등 거시지표의 안정을 기대하며, 각종 정책상 포퓰리즘 요소가 사라진 안정적인 정책 기대
 - 작년의 선심성 공약으로 재정적자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포퓰리즘적 성향 강화가 우려되었으나 신정권에서는 공산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작년에 신평사들이 인도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전환하였는데,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기존의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전환되어 금융기관들의 신용한도축소, 포트폴리오 편입비율 하락 등 금융 태풍이 될 소지가 있었음
- 외국계 은행에 대한 개방 폭 확대를 바라고 있지만 그 가능성과 개방 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음

□ H자동차

- 힌두우월주의에 바탕을 두고 외국인 투자를 배척하는 BJP가 집권할 경우 사업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됐으나, 국민회의당이 이끄는 UPA가 재집권함으로써 큰 변화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안정적인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
- 작년의 선심성공약으로 재정적자 증가 및 이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이 있었으나, 신정부출범으로 재정적자폭 감소, 부도율 하락 등 거시지표 안정을 기대하며, 각종 정책상 포퓰리즘 요소가 사라진 정책을 기대

□ P건설

- 각종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공산정당을 연정에서 배격함에 따라 각종 프로젝트 승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

□ L사(유통업)

- 소매유통업이 개방된다는 이야기는 무수히 나오고 있으나 빠른 속도의 개방이 아닌 점진적인 방식의 개방이 될 것으로 예상
 - 한 번에 멀티브랜드 유통업의 지분상한선을 51%까지 인정해 주지는 않고, 26% → 49% → 51%식으로 순차적으로 지분상한선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임
 - 손회사 설립 시 외국인 간접투자지분에 대한 새로운 지분환산법이 도입되면서 이를 통해 진출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기도 하였으나, 소매업개방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보다 유리한 규정을 통해 진출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H사(석유화학)

- 신정부는 중화학공업 특례단지인 PCPI¹⁰⁾를 설립하는 등 중화학공업 육성을 중시하므로 이 분야의 수혜가 예상되지만, 혜택이 외국기업에까지 전달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외국계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투자확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
- 석유화학산업 분야에는 릴라이언스라는 막강한 인도 대기업이 존재하며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외국계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투여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은 아님
- 과거 보팔 가스 유출사건으로 인해 외국계 화학기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점도 외국계기업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음

보팔 가스 유출사고

- ▶ 화학약품 제조회사로 인도 보팔시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농약을 제조 판매하던 미국 다국적기업인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화학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세계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로 기록되고 있음
 - 1984년 12월 3일 심야에 발생한 이 사고는 농약 원료로 사용되는 42톤의 메틸 이소시아나염(MIC)이라는 유독가스가 누출되면서 시작됨. 사고발생 후 2시간 동안에 저장탱크로부터 유독가스 8만 파운드(36톤 상당)가 누출됨
- ▶ 지금까지도 공장에서 빠져나온 화학 물질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공장을 관리하던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책임 문제나 소송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10) Petroleum, Chemicals, Petrochemicals Investment Region

2009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Issue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시장 틈새시장	2009.1
09-002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2009.1
09-003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2009.2
09-004	美 경기부양법인 분석 및 활용전략	2009.2
09-005	러시아 CIS 수출환경변화와 진출확대방안	2009.3
09-006	한-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	2009.4
09-007	2009 美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 주요내용 및 시사점 -	2009.4
09-008	미·중·일 그린뉴딜 정책	2009.4
09-009	금융위기속 CIS 진출 기업 및 바이어 동향	2009.4
09-010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아프리카 - 중국, 일본, 인도의 진출현황 및 시사점 -	2009.4
09-011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의 대아시아 현지진출전략 변화와 시사점	2009.5
09-012	인도 신정부의 경제통상방향과 전망	2009.6

●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 자동차시장 미리보기	2009.2
09-002	중동의 5대 비즈니스 유망 분야	2009.2
09-003	한-호주, 뉴질랜드 BT산업 협력방안	2009.3
09-004	새롭게 바뀌는 일본의 수입 인증제도	2009.3
09-005	불황기 중국시장, 소비트렌드를 읽어라	2009.3
09-006	일본 소비재 유망상품 및 수출방안	2009.3
09-007	새롭게 주목받는 美 흑인시장	2009.3
09-008	아프리카 전력시장 ON - 전력산업 현황과 진출 방안	2009.3
09-009	중국 내수의 新 블루오션, 유망 2,3선 도시 소비 포인트	2009.3
09-010	세계 전자산업 및 시장의 재편과 우리기업에의 기회	2009.4
09-011	동남아 CDM 시장현황과 기회	2009.4
09-012	중동에 펼쳐지는 친환경 녹색도시 - 그린산업현황과 기회	2009.4
09-013	해외 LED 5大 시장 진출전략	2009.5
09-014	인도 소매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9.5
09-015	미국의 쿠바 제재조치 완화와 한-쿠바 교역	2009.5
09-016	아세안 휩쓰는 '경제한류'	2009.5
09-017	자동차 부품의 틈새시장, 중동·북아프리카를 가다	2009.5
09-018	미국 新성장 전자부품 시장동향	2009.5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9.1
09-002	해외 프로젝트 진출 연찬회	2009.1
09-003	해외 주요국 레저보트산업 조사	2009.1
09-004	2009년 지역별 수출유망상품	2009.2
09-005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2009.2
09-006	2009 외국인 투자환경 만족도 조사	2009.3
09-007	러시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시장동향	2009.3
09-008	CEO・HR マネージャー向けの主要労働判例集 (2008年改訂版)	2009.3
09-009	중국 내수유통 경영실무 가이드	2009.4
09-010	그린허브코리아 주간 2009 종합결과보고서	2009.5
09-011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유럽편	2009.5
09-012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미주편	2009.5
09-013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아시아편	2009.5
09-014	주요국 정보통신현황 - 중동/아프리카/CIS편	2009.5
09-015	해외 주요국 LED 시장동향	2009.5
09-016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09.6
09-017	법령으로보는 중국 노무관리실무가이드	2009.6
09-018	2008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8)	2009.6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9.1
09-002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09.1
09-003	유럽 재생에너지시장 진출설명회	2009.1
09-004	한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 설명회 및 상담회	2009.1
09-005	TRADE KOREA 2009 해외시장개척 설명회 및 상담회	2009.2
09-006	TRADE KOREA 2009 해외 마케팅 핸드북	2009.2
09-007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9.2
09-008	미-중-일 그린 비즈니스를 잡아라	2009.4
09-009	일본기업 부품소재 구매전략 설명회	2009.4
09-010	중국 내수시장을 제대로 뚫기 위한 성공조건과 공략방법	2009.4
09-011	중국 부품소재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2009.6
09-012	미국 자동차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2009.6
09-013	유럽 자동차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아시아 주요 완성차 구매전략	2009.6
09-014	CIS 주요국 시장변화와 진출전략	2009.6
09-015	중국 내수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노무·세무 핵심 포인트	2009.6
09-016	베트남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설명회	2009.6
09-017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사업기회	2009.6

작성자

- ◆ 아대양주팀 김민정 과장
- ◆ 뉴텔리 KBC 이해인 과장

Global Issue Report 09-012

인도 신정부의 경제 · 통상방향과 전망

- 발행인 | 조환익
- 발행처 | KOTRA
- 발행일 | 2009년 6월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 전화 | 02) 3460-7114(대표)
-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9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